

이슈 리포트

11

2003년 9월 네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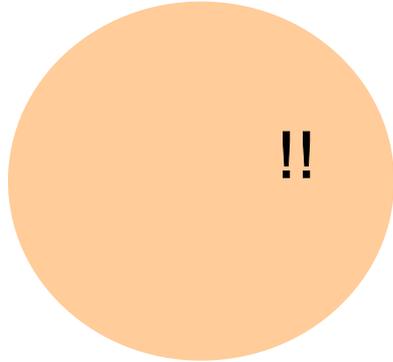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과병찬성 반박
- 노동자 세상:	노동정책 6개월
- 통신정책:	u-센서 네트워크 세상
- 정자동 6층에서:	산별노조 3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세계돋보기



미국이 최근 한국과 터키, 파키스탄 등에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보수 언론에서는 파병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현혹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경제군사적 이유의 허구를 낱알이 밝혀, 우리 나라의 아들들의 죽음을 막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주국가임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1. 가 ?
가
IMF
가 가 . ,
?

▶ 파병을 해도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제조·서비스업 분야에서 약 2백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미국은 현재 미국의 높은 실업율(8월현재 6.1%, 5개월연속 6%대,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 참고로 한국의 8월 실업율은 3.3%임)을 해소하기 위해 고학력층 보다 실업률이 높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은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의 조치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낮아져 수익성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용의 증가에는 크게 효과가 없자, 기존 보수주의 통화경제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5월과 7월 상

원 의회증언에서 미국에 수출비중이 높고 무역수지를 많이 내는 나라들(주로 중국/일본/한국/대만 등)에 대해 환율을 내려야 미국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각국의 환율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실제 올봄 1차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경제에 영향력이 큰 하이닉스반도체에 고용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자동차와 철강, 제약 등 다방면에서 통상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2. 가 , ,

?

▶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라크의 석유개발과 전후 재건사업 참여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완전히 식민지로 장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루에도 미군 여러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있고, 최근 이라크에서 반미/반외세 감정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2배 이상인 국토를 이라크는 보유하고 있어 게릴라전이 보다 더 원활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의 베트남전 처럼 미국이 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자국의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또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 경쟁기업들보다 유전/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건설기술에 있어서 기술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다지 가치가 높지 않은 하도급 물량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도급 물량마저도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처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여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적자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투병을 파병하면 1조원 가까운 파병비용과 또 전후 이라크 복구 분담금도 미국이 여러 나라에 몇백억 달러 가까이 떠안길려고 하는데, 기존 반대국들인 프랑스 등 UN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분담금을 프랑스 등 기존 파병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일본과 우리나라 등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할 경우 이중 몇십억달러 이상의 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화로 몇조원 가까이 내야될지도 모르는 상태다. 태풍피해까지 겹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된다. 또 파병해서 인명이 살상될 경우 소비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심리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도리어 중동내 드높아지는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만약 미국이 크나큰 수렁에 빠지게 되면 아랍 산유국들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원유수입대금 단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중동은 연간 2천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쪽에 그동안 비중이 작았다. 따라서 중국과 더불어 21세기에 중동은 우리나라에 크나큰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한국의 좋은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가 , 50 가 . 가 가 가 가 ?

▶ “ 갈테면 니네가 가!

한미동맹의 50년 역사의 정당성 여부부터 논하여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자. 백배 양보하여 한미동맹을 인정하더라도 한미동맹과 이라크 파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 하면 미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 자체내에서도 거센 반대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 침략자 체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이라크 내에는 아무리 뒤져도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부시 스스로도 9.11테러와 후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

부시가 이라크 파병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전쟁과 계속되는 미군들의 죽음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자 내년 재선을 위해 이들 미군을 대신할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병요청은 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부시의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부시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파병에 응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내년 선거에서 부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파병한 것이 도리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판단의 문제이다. 도리어 전쟁을 반대하는 반도의 위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부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패러디가 “ 갈테면 니네가 가!”라고 한다.

부시가 원한다면 차라리 애꾸진 우리의 아들딸보다는 그 편이 낫 수도 있지 않은가?

※ 참고:

‘ 오마이 뉴스 고대진 칼럼의 ‘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관계와 상관없다’

‘ 시대정신 이정호글의 ‘ 파병해도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 ♪

'말'을 통해본 노대통령 노동정책 변화

“

”

노무현 정권 출범 6개월에 대한 평가가 여러 시각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이견이 있다. 친재벌 반노동 정권이라는 시각부터 노무현정권은 출발 자체부터 노동자정권이 아니었기에 기대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시각, 그리고 미국의 압력, 경영진들의 기업철수 공갈협박, 조중동 보수언론의 집중 공격 등으로 노무현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양나는 시각도 있다. 조급한 판단보다는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투쟁을 통해 고쳐나가는 등 노동계 스스로의 전략과 전술에 입각하여 국민 여론을 얻고 유리한 정세와 정책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심론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하여튼 언론노조 노보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돌아보는 글이 있어 소개한다.

월간 말지 8월호는 노대통령의 변신을 이렇게 적고 있다. “‘파업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2002년12월18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명동에서의 마지막 거리유세 중 한 말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포브스’지 편집장과 만남에서 노대통령은 ‘노동자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일까...노무현대통령, 들고 있는 몽둥이를 일단 내려놓으시길.”

6월28일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불과 2시간만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개 패듯 두들겼다. 이 날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두고 동아일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제 갈 길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썼다.

그 때문인지 노대통령은 파업노동자의 구속과 1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귀족노조 운운하며 대기업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윤리를 질타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듯 대통령이 가장 적대시하는 조선일보마저 노대통령의 노동관을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8월27일자 조선일보는<“物流(물류)같은 국가기능 불모는 용납 못해” 盧대통령, 勞에 연일 초강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노 대통령은 8월25일 경제신문들과의 회견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노동운동 갖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타협 없는 투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타협하려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해왔다’는 부분은 노 대통령의 일련의 노동 관련 발언 중 가장 강경한 것이다.”

잘나가던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 노대통령이 몰라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몽개며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심하다. ‘토론의 달인’답지 않게 전혀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노동자 대표들의 대표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노동자대표에게 지도력이 문제가 있다면 노대통령의 지도력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파업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자리에 오른 분이 파업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고사하고 몽둥이로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이 지도력인가. 남의 눈에 들어왔은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는 ‘나쁜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했음을 전하고 싶다.

노대통령은 8월26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물류와 같은 국가경제의 주요 기능을 볼모로 삼아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기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물류마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파업에 민주노총이 밀접히 개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고 일방적인 불법행위인 만큼 민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밀접히 개입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달변은 달변이다.

‘국가경제의 주요 기능을 볼모로 삼아’라는 수사는 이미 군사독재시절부터 독재자와 수구언론으로부터 수 십 년간 들어온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사항도 지겹도록 들어온 후렴구이다.

차라리 파업주동자를 ‘발본색원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솔직히 요즘은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두렵다. 오늘은 또 어떤 약속들이 뒤집어 질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말 바꾸는 노대통령이 갈수록 무섭다. - 양문석(전국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u-

정보통신부는 2007년까지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81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통신, 가전기기간 거미줄처럼 얽힌 선을 없애고 물품에 코드를 부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실시간 물품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획기적인 매출 상품부재로 인해 결국 특별명예퇴직 시행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KT로서는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이슈리포트 8호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정책적 계획을 포함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u-센서 네트워크'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1. 서비스 개념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 가공함으로써 개체간 정보교환, 측위, 원격처리,권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 집과 사무실 등에서 쓰는 TV나 VTR, PC 등 정보통신·가전기기에 u-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면 선이 필요 없어 설치하기도 쉽고 모니터나 스피커 등을 원하는 곳으로 옮겨 편리하게 보고들을 수 있게 된다.

광대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과 u-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홈 네트워크를 연동하면 수십Mbps의 고선명 동영상을 홈서버와 무선으로 연결된 고선명 모니터, 고음질 스피커로 즐길 수 있다.

또 전자태그가 붙은 물품을 사면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센서가 있는 문을 지나

치기만 해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에 RFID(용어해설 참조)를 부착, 타이어의 압력정보를 운전자에게 보내면 알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해 승차감과 제동력을 높여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2. 어떻게 추진하나

u-센서 네트워크의 핵심기술인 WPAN(무선 개인 근거리통신망,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UWB(Ultra Wide Band, 용어해설 참조), RFID(용어해설 참조), 지능형 무선 센서망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모두 38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RFID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표준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RFID 연구센터를 올해 말부터 설립·운영한다.

RFID는 제품에 붙은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기술.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코드처럼 일일이 리더기에 제품을 갖다 댈 필요 없이 리더기 주변에 제품이 놓여 있기만 하면 된다. 또 바코드보다 입력정보량이 수천 배나 많아 여러 곳에 활용된다.

RFID 연구센터는 국제 표준을 고려한 국내 주파수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산업체간 협력체계 강화, 분야별 응용모델 제시,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무선랜, UWB, RFID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관련 주파수를 발굴, 내년 중에 분배하기로 했다.

무선랜 주파수로는 기존 2.4GHz와 5.8GHz 대역(183.5MHz 대역폭) 말고도 WRC-2003 회의에서 결정된 5GHz대역(5150-5350MHz, 5470-5725MHz; 총455MHz 대역폭)을 추가로 분배할 방침이다.

RFID 주파수는 기존 135kHz, 13.56MHz, 2.45GHz대역 외에 국제표준 등을 고려, 860~930MHz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추가로 분배한다. UWB용 주파수는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 국내 수요와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에 분배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비허가 무선기기 주파수 이용제도가 엄격한 용도제한·출력제한(10mW이하)을 두고 있어 무선기기를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 소출력 이용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한 전파기기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 수준을 미국·유럽 등의 기준을 감안, UWB 등 새로운 무선기기를 쉽게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세분화된 용도를 통합 조정할 예정이다.

3. 시장 전망

1) 세계 시장

- RFID(용어해설 참조) 시장은 2005년 30억불 규모에서 2010년에 100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
- UWB(용어해설 참조) 시장은 2003년 1억 8,800만불 규모에서 2007년 13억 8,500만불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

2) 국내시장

- RFID 시장은 2003년 660억원 규모에서 2007년 3,18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UWB 시장은 200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07년 7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

※ 용어 해설

◇ UWB(Ultra Wide Band):

기존에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과 간섭없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백 Mbps에 이르는 광대역 주파수 대역폭을 가질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투스의 약 1/4의 적은 전력 소모와 벽과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특성도 갖고 있어 건물 투시, 자동차 충돌방지, 단거리 광대역통신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 RFID(무선인식):

지속적으로 전파를 발산하고 있고 ID와 DATA가 저장된 카드(TAG)가 그 전파 범위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ID와 DATA를 안테나로 전송하여 인식하는 기술. 전파는 10KHz ~ 300GHz가 사용되는데 주로 저주파(134.2KHz)가 사용되고 있고 CARD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코일 및 선택적으로 Battery로 구성되며 64bits ~ 8kbytes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참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ㄴ



6층에서

“ 가? “ -

☞ 산별노조 관련 마지막 연재입니다.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편집게재 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기업 노조의 경우 조직력과 인력, 재정이 안정적이기에 산별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위 기업 노조로서는 그동안의 활동 경험상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산별 움직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이해관계의 집착보다는 전체 노조운동 속에 KT 노조를 조망하고, 전체노동자의 발전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의 발전도 함께된다는 마인드의 전제속에 적극적인 산별에 대한 이해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산별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부 산하 지회로 재편됩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본조와 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각 각 해당지역의 지부 산하 지회로 재편됩니다. 예를 들면 동양에레베이터는 한 사업장이지만 서울 지부 산하 서울 지회와 경기지부 산하 안산 지회, 충남지부 산하 천안 지회로 편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노동조합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 사업장과 조합원의 규모가 큰 사업장노조의 경우 독립적인 기업지부로 편재될 수 있습니다.

2. 산별노조 지회 활동과 기존 단위노조의 활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겉으로 보면 임단협과 노사협의회, 일상활동 등 활동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연맹 등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른 각종 활동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자적인 조직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집행 기구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활동의 기준이 노조와 지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노조 사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현장 조직 활동에 주력합니다.

각종 활동이 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도 노조에서 내려오는 지회 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노동조합 같은 기업별 지부의 경우는 활동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지금의 연대활동은 강화하여 노력도 많이 해야하고, 그만큼 조직력도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최근 금속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하고 노동시간단축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산별 교섭인가요?

완전한 산별중앙교섭은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해당 사업장 포괄)가 구성되고, 산별노조가 이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노동조건 균등화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 고용안정, 산업정책 등의 요구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적용 대상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신산별노조가 구성된다면 노동시간, 산별최저임금 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4. KT노동조합 경우 산별형태는 어떻게 구성되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산별에는 대산별과 소산별 등이 있습니다. 현재 KT노조가 속해 있는 공공연맹이 추구하는 산별형태는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교사, 보건, 운송, 통신 등 모든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을 하나로 조직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선 과도기적으로 정부출연 연구노조, 통신소산별 노조, 운송노조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상업서비스노조, 건설노조 등이 소산별노조에 해당됩니다. 통신산별노조도 소산별에 해당되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소산별이 아직까지는 일반적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업종별 중앙교섭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된다면 소산별노조는 매우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연재 끝>>♪

만

화

방

